

미국 신정부 대비, 자동차 민관 대응 강화

- 우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창출 모색

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, 장관 안덕근)는 1월 23일(목) 10시 대한상공회의소(서울)에서 ‘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 회의’를 개최하였다.

* (참석자) (산업부)제조산업정책관, (산업계)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,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, 현대자동차, 한국지엠, (연구기관)산업연구원, 한국자동차연구원

이번 회의는 1월 20일(미 현지시간)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정책방향 중 우리 자동차 업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분석,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. 동 TF는 작년 11월 산업부 장관 주재 ‘자동차 업계 영향 점검회의’ 후 구성돼 우리 자동차 수출 최대시장인 미국의 정책 변화에 긴밀히 대비해왔다.

미측 행정명령에 따르면 ▲완화된 자동차 환경규제의 도입, ▲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정책이 검토될 예정이다.

*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관련 행정명령: ①미국 에너지 생산확대(Unleashing American Energy), ②미국 우선 무역정책(America First Trade Policy), ③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 철회(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s Orders and Actions) 등

참석자들은 동 행정명령이 실제 실행되기까지 다소간 시간 소요가 예상되나,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. 이에 정책 입안 초기에 아웃리치를 통해 미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정보 공유 등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하였다.

산업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“앞으로도 미측 동향을 지속 확인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며, 풍랑 속에서도 우리 업계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	책임자	과 장	박태현 (044-203-43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은성 (044-203-4321)
			사무관	채기천 (044-203-4327)